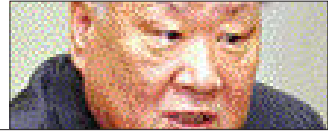


정몽구회장 귀국 언제?



전방위 압박...오래 못 버틸듯

현대·기아차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도중 돌연 미국으로 출국한 정몽구 회장의 귀국 가능성이 높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정 회장의 이번 방미가 계획된 일정에 따른 것인 만큼 1주일 뒤 귀국한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상 정 회장의 조기 귀국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전날 정회선 기아차 사장의 정 회장의 귀국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는 데 대한 대응책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다”=정 회장의 귀국이 어렵다는 전망은 현대차와 정 회장을 둘러싼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지난 3일 “현대차그룹의 비자금 외에 ‘별건’ 단서를 확보했으며 이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회장의 갑작스런 출국을 계기로 검찰이 사실상 현대차에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이를 두고 검찰이 현대차의 경영권 승계 문제 등과 관련한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었다.

검찰은 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로 연결되는 순환지배 구조를 지닌 현대차그룹 정 회장이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 계열사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정 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자금을 마련해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계구도 문제와 별도로 정 회장 일가의 개인 비리 단서가 확보된 것이 아니냐는

검찰 “또 다른 비리” 수사망 확대 그룹안팎 여론도 귀국 앞당길듯

추측도 나온다.

실제 검찰은 양재동 본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글로벌스와 현대오토넷의 비자금뿐만 아니라 현대차 본사 차원에서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자금을 관

리해왔음을 의심케 하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열사들의 비자금이야 계열사 사장 등의 선에서 꼬리를 자를 수 있는 사안이지만 현대차 그룹 자체의 비자

금이려면 정몽구 회장이 검찰의 직접적인 사정권 안에 들어온다는 점도 정 회장으로선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하청업체 납품단가 인하 등 정부의 상생 경영 의지에 반하는 경영을 하면서도 한 쪽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되면 현대차는 도덕적 측면에서도 치명타를 입을 게 뻔하다. 게다가 2004년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가까스로 사법처리를 면한 적이 있는 정 회장으로선 검찰 수사망이 자신을 향해 좁혀오는 것도 귀국 결정을 힘들게 만드는 요소일 수 있다.

◇귀국 득실 ‘저울질’=그러나 정 회장이 귀국을 미루면 득보다 실이 많아서 귀국을 무작정 늦출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않다. 검찰이 “정 회장이 귀국하지 않으면 제반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도 부담이지만 검찰 수사가 어느 선까지 나아갈지 예측불허인 상황도 정 회장의 귀국을 재촉하는 요인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현대차의 약점을 모두 파악하고 칼자루를 쥐고 있어서 정 회장은 사면초가인 셈.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아낼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정 회장이 당분간 ‘시간벌기’를 하다가 적당한 시일 내에 귀국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그룹의 사활이 걸린 문제와 관련해 총수가 해외에서 마냥 관망하기보다 의연하게 돌아와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룹 안팎의 여론도 정 회장의 귀국을 예측케 하는 요인이다. /연합뉴스



4일 현대차 비자금관련 서울 대치동 O캐피탈 사무실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중 취재진이 물리자 한 관계자가 문을 잠그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당 “본인에 소명 기회” 한나라 “빨리 처리 하자”

‘최연희 사퇴결의안’ 논란끝 통과

국회 운영위 ‘수정 동의안’ 만장일치 처리

국회 운영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성추행 파문으로 한나라당을 탈당한 최연희 의원의 의원직 사퇴촉구 결의안을 논란 끝에 통과시켰다.

여야는 특히 이날 최 의원의 소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표결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사퇴 거부시 보다 강도높은 조치를 강구기로 한다는 내용의 사퇴촉구안 수정 동의안을 상정키로 협의, 진통끝에 표결을 결정했다.

결의안은 재석 의원 17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돼 본회의로 넘겨졌으며, 결의안 상정에서부터 표결까지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질척지는 신속히 진행됐다. 김한길 운영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사퇴촉구 결의안 처리를 놓고 많은 말씀이 계셨지만, 합리적으로 교섭단체간 합의를 통해 잘 처리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회의는 “최 의원이 직접 나와 사건 경위를 밝히고 소명의 기회를 갖도록 일단 결의안 처리를 연기하자”는 열린우리당측 주장과, “최 의원의 불출석의사가 사실상 명백함에도 이를 빌미로 결의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는 한나라당 등 야당측 의견이 맞서 정회기가 이어지는 등 파국을 겪었다.

우리당 간사인 조일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결의안을 오늘 처리한다고 해서 단번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만큼 불출석한 최 의원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출석을 촉구하는 방법이 낫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간사인 안경률 원내 수석부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성추행 파문으로 한나라당을 탈당한 최연희 의원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을 표결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본인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여야가 처리하기로 한 사항을 미루자는 것은 여당답지 못한 행동이고, 정략적 꼼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선거용 선심정책” “소요시간 쏠 없어”

호남고속철 공주·정읍역 신설 건교위 의원들 미묘한 입장차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정읍역 신설과 관련, 지역 건설교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4일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지난 7일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발의한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정읍역 신설 공약 이후 건교부가 당협협의 및 SOC 추진위원회를 통해 정차역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초 기본계획에도 없던 공주역·정읍역 정차역 신설은 정부가 여당의 지방선거용 선심정책에 들러리를 서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공주는 오송에서 불과 2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시간상으로도 5분 거리에 불과, 정차역을 신설한다면 호남고속철은 저속철로 전락한다”며 “정부가 정차역 신설에 나선다면 지난 오송분기기 결정에 이은 또 한번의 호남고속철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낙연 의원은 “고속철도가 발달된 일본에서도 계획에 없던 역이 느닷없이 생기면 이를 ‘정치역’이라고 부른다”며 “이제까지 아무 소리 없다가 갑자기 새로운 정차역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호남고속철에 공주역·정읍역을 신설한다 해도 정차역을 조절해 열차를 운용한다면 전체적 소요 시간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선진국의 정차역 간격도 30km 내외인 점을 감안한다면 정차역 신설을 검토하는 것은 그리 무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은 “광주·전남지역만을 위한다면 정차역 신설은 그다지 반길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전국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정차역 신설은 심도있게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이날 답변을 통해 “공주역·정읍역 신설은 지역 민원을 바탕으로 SOC 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 앞으로 공주역·정읍역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 ‘김재록 게이트’ 與 3인방에 공세

강금실·강봉균·김진표씨 유착 의혹 집중제기

한나라당이 김재록씨 금융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한 대역 공세의 표적을 여당내 ‘3K’로 좁혀가고 있다.

3K는 강금실 전 법무장관,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다.

한나라당은 여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와 주요 당직자들인 ‘3K’와 금융로비스트 김씨간의 유착관계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지방선거 정국외 주도권을 잡아나간다는 심산이다. 동시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급작스런 출국과 현 정권 배후설을 제기하며 게이트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씨의 로비 의혹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 하에 김씨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준비중이다. 이계진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강봉균 김진표 강금실 등 3K와 관련한 많은 의혹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하고 신속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3K’에 대한 공세를 공식화했다.

박근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론스타 사건이나 ‘김재록 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증대돼 있고 국부유출 문제 등으로 국민의 분노도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국가에 큰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김씨 로비 의혹과 관련한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 철저한 내부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검찰수사와 국정조사에 대비,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의 출국금지를 주장했다.

한편 ‘당 김재록게이트 진상조사단’ 소속 순법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김씨가 수감돼 있는 대검찰청을 방문, 김씨 접견을 공식 신청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행영조와 함께하는 제2회 보성농차 마라톤 대회

- 온누리러 영웅 광명초 선수가 배려받기 위해 달립니다.
- 밝아진 도시가 동호반 여과부와 기록을 단축하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 달릴이 해린분들 축하와 격려를 넉넉히 실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제의 고장으로 제2회 보성농차 마라톤 대회에 참가합니다.

일 : 2006. 5.7(일) 오전 9시
장 소 : 보성군 공성삼동리
참가종목 : 풀코스, 하프, 10Km, 5Km
해니매들코스, 하프, 10Km)
참수기간 : 2006. 4. 14(금)까지
홈페이지 : http://www.bosongmarathon.net
문 : ☎ 061) 650-5291~2
보성군청 : http://www.bosong.go.kr
광주일보 : http://www.kwangju.co.kr
한국마라톤협회 : http://www.kmof.or.kr



주최 | 보성군 · 광주일보사 주관 | 전국마라톤협회